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EAFTA)

동아시아 경제통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아세안+3+인도·호주·뉴질랜드)에서 본격 점화됐다.

□ 논의 경위

- 아세안 10개국은 지난 25일 태국에서 열린 동아시아 서밋 의장성명을 통해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와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CEPEA)' 구축 원칙에 동의하며 원산지 규정, 관세 목록과 관세 관련 이슈, 경제협력 문제 등을 다룰 4개의 워킹그룹을 구성기로 합의
- EAFTA는 아세안과 한·중·일 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자는 주장으로 한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CEPEA는 아세안과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궁극적으로 EU와 같은 경제공동체를 만들자는 방안으로 일본이 주도
 - 2015년까지 경제통합을 이루자는 목표를 갖고 있는 아세안 10개국은 각국 경제장관들에게 아세안을 넘어선 동아시아 경제통합 방안과 관련한 권고안을 다음 회의에 제출토록 했으며, 한·중·일·인도 등과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 표명
-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3 정상회의에 제출된 동아시아 경제통합 실현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높이 평가하면서 “동아시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초 작업들을 정부 차원에서 진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

- 이 보고서는 아세안과 한·중·일 경제전문가들이 2년 동안 작업한 결과로 아세안과 한·중·일이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할 경우 세계 경제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다는 내용
- 또한 이 대통령은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통합은 교역과 투자 증대는 물론 지역내 각국 국민들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동아시아 각국 간의 유대를 한층 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

□ 민간연구 성과

-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일본 종합연구개발기구(NIRA),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에서 2003년부터 한중일에 국한한 FTA에 대해 공동연구 진행
 - 공동연구 보고서 매년 발간
- 최근 들어 EAFTA에 대한 국내 연구가 활발함
 - 한국경제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경제통합’(2009.9)에서 동아시아 경제의 장기 발전 과제로 우선 높은 역외 의존도라는 문제점을 역내 수요의 진작을 통해 해소하기 위해서는 EAFTA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
 - * 이를 위해 동북아 3국이 먼저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통한 실질적인 시장통합을 이루어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을 선도할 것을 제시
 - * 장기적으로 역내 환율 안정을 위해 과거 유럽통화단위(ECU)와 같은 고정환율 제도 형식의 바스켓제도를 원용한 아시아통화단위(ACU) 도입의 검토를 제안

□ 향후의 전개

- EAFTA에 관한 논의는 앞으로 민간연구 단계에서 정부간 협의로 격상, 발전
 - 구체적으로 품목 분류, 원산지 규정, 통관, 경제협력 4개 분야에서 실무작업단(위킹그룹)을 만들어 협의 예정
 - * EAFTA는 FTA가 지역 양자적으로 될 경우 발생하게 될 부정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한국이 그 필요성을 제일 먼저 제기했고, 이후 민간단계의 연구가 진행해왔음

- EAFTA는 FTA가 너무 양자적으로만 될 경우 부정적인 요인도 있으므로 조금 더 큰 덩어리로 논의해 보자는 것으로 지금 당장 현실성이 있다기 보다 가능성을 보고 논의하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음

<참고자료>

‘日中韓FTA 産官学共同研究’ (2009.10.25 日本経済新聞), ‘広域FTA政府間で協議’ (2009.10.26 日本経済新聞), ‘아세안+3 FTA, 정부간 협의로 격상 발전’ (2009.8.19 파이낸셜뉴스), ‘동아시아 FTA’ 논의 본격화(조선일보 2009.10.26) 등 국내외 주요언론보도 종합